

보상 아니면 국유림과 교환 필요

- 자연공원 사유재산권행사요구에 대한 소견 -

송 홍 선 / (민속식물연구가/한국임업신문 편집국장)

어느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독립가를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얘기를 주고 받았다. 일상의 얘기였지만 그 가운데는 공감이가 가는 주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자연공원내에 편입된 산림주인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소연처럼 말하는 내용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애써 조립한 산림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원에 편입돼 사실상 영토토록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가의 하소연은 계속됐다. 상세한 설명투의 얘기가 계속됐다. 공감을 주는 얘기가 이어졌다.

“자연공원내의 사유림 소유자 모두는 자신의 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입산할 때 사유재산권 행사는 커녕 도리어 공원입장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은 공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사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공원내의 모든 산주는 사유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산주의 사권행사 요구가 집단화·조직화되고 있다. 자연공원내 사권보상대책위원회(가칭)가 구성됐는가 하면 한국독립가협회에 자연공원 편입산주 신고센터가 설치된 것이다.

이처럼 사유재산권 행사요구가 집단화·조직화 되기까지는 한국독립가협회·한국임정연구회·한국임학회등 임업단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임업단체는 11월초 청와대·내무부·국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림청 등에 시업제한 등 소유권을 제한받는 공원내의 사유림에 대한 보상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들 임업단체는 건의서에서 소유권을 제한받는 사유림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의 국유림과 교환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내무부와 산림청은 정부예산이 없어 매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을뿐 보상금 지급이나 다른 지역의 국유림과 교환하는 등의 대책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다.

이처럼 건의서에 대해 해당부처가 적절한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산주의 사권행사요구가 점차 집단화·조직화 됐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에 한 번 해보는 소리다. 제발 산주나 해당부처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줬으면 한다. 되도록 산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쯤해서 각도를 약간 달리해 본다. 현재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20, 도립공원 20, 군립공원 27개소등 모두 67개소이며 남한국토면적의 약 4%에 이른다. 자연공원내에 편입된 사유림의 면적은 국립공원의 경우 351천ha중 140천ha, 도립공원 66천ha중 55천ha, 군립공원 21천ha중 14천ha등 총 438천ha 가운데 209천ha이다. 공원내에 편입된 사유림의 면적은 총 공원내 산림 편입면적(438천ha)의 48%나 차지하고 있다. 절반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산주는 자연공원 사업에 똑같이 절반씩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예기의 각도를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 국가는 절반을

투자했으면서도 수입은 왜 모두 챙겨야 하나, 절반투자 절반수입의 경영원칙을 잠시 잊었는가. 왜 절반의 수입을 빼앗는가 말이다(이는 보상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한 것임). 이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국가는 이 문제를 어렵게라도 인정한다면 곧바로 공원수입의 절반을 산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얼마만큼이라도.

한가지 얘기를 덧붙이면서 마무리할까 한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보호·이용면에서 잘 정리돼 있는 미국등과는 달리 관리자인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구역내에서 행하는 일정한 행위만을 규제한다는 지역제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내의 자연보호가 미흡하다. 국가는 공원내에서도 전원개발, 관광개발 등이 추진돼 자연경관의 파괴가 심화됐던 일이 지역제 공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국가는 경관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원내의 사유림을 공원외의 국유림과 교환해줘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차제에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업무가 산림청으로 이관되면 어떻까하는 생각도 부질없게 해 보았다.

몇일전 하소연하던 독립가를 그때 그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독립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일이 쉽게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